

발간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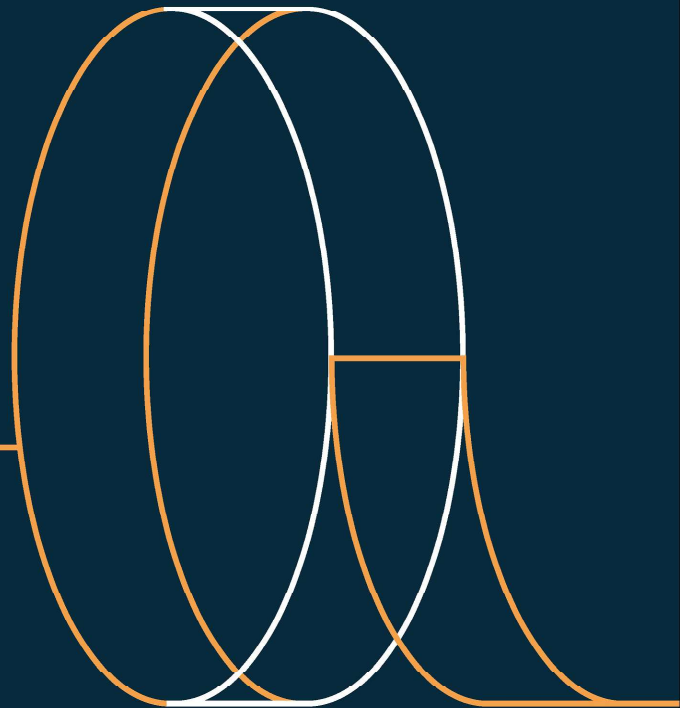
11-1270000-001117-14

# 제6차 국가보고서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정부

# CONTENTS

<b>제1조 및 제4조</b>	
질의 2 고문의 범죄화 및 처벌 관련 주요 형법 개정사항	4
질의 3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5
<b>제2조</b>	
질의 4 수용자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때부터 모든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7
질의 5 고 백남기씨 사건 관련 후속조치	13
질의 6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및 고 백남기씨 사건 이후 집회 관리 조치	15
질의 7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현황	16
질의 8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장소에서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처리	17
질의 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19
<b>제3조</b>	
질의 10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자 관련 권리보장 개선 조치	21
<b>제10조</b>	
질의 11 법집행 공무원 대상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교육	25
<b>제11조</b>	
질의 12 인신구속 대안, 과밀수용, 독방구금, 보호장비 및 수용자 인권 현황	27
질의 13 독방 수용 기간, 수감자의 검진사항 및 징벌위원회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보장	29
질의 14 대용감방 폐지 현황	30
질의 15 교정시설 내 사망 사건 현황 및 예방조치	31
질의 16 사형제 폐지 계획 및 사형수 정보	33

---

**제12조 및 제13조**

질의 17 군대 내 인권침해 대응 조치	35
-----------------------	----

**제14조**

질의 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피해구제 조치	38
----------------------------------	----

**제16조**

질의 19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	40
질의 20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적 및 기타 보호조치	43
질의 21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 및 이민자 구금시설 개선 조치	46
질의 22 인신매매 범죄화 및 퇴치 노력	48
질의 23 법률적·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조치	51
질의 24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군사 재판 및 영창제도 현황	52
질의 25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및 비자의 입원 조치 현황	54

**기타 쟁점**

질의 26 테러방지법 현황	57
질의 27 코로나19 확산 등 비상사태에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노인요양원, 정신의료기관 등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조치	59

**부록**

60

**영문본**

81

- 1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으로서 고문방지협약 제19조에 따라 제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및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술하였다.

## 제1조 및 제4조



질의 2.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7~8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고문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고문의 정신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 등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특정한 사람들 이외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문을 정의하기 위한 「형법」 개정
- (b) 국내 「형법」에 따라 기소된 고문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의 개정이 있었는지 여부(A/HRC/37/11, para. 132.91)



- 2 (a)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문을 정의하기 위한 형법 개정  
현행 「형법」 제125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보조하는 사람의 인권침해행위를 처벌하고, 고문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제12조제2항)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규정으로서 모든 고문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이하 ‘가혹행위’라 함)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로 의율하여 처벌 가능하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가혹한 행위’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모든 형태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현재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형법」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형사범죄법’으로 약칭) 제9조(인도에 반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으로 약칭)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등에 의하여 모든 형태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 정의규정 신설 필요성은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b) 고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보장했는지

- 3 지난 보고 이후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 개정은 없었다. 다만 「형법」 제125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특가법」 제4조의2는 「형법」 제1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상한을 두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가혹행위일지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반적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해 2배 이상 법정형의 상한을 가중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고문 또는 가혹행위로 상해에 이르는 경우 법정형에 상한이 없는 「특가법」 제4조의2를 적용받으며, 법원이 개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처벌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질의 3.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9~10번 문단)와 관련하여 고문 금지는 절대적이고 훼손 불가능한 원칙이며, 「국제형사범죄법」 제6조 외에도 고문 행위, 고문 시도 또는 고문의 종범 및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대상기간 중 개정된 국내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 4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이하 ‘집단살해죄등’이라 함)[같은 법 제8조(집단살해죄)부터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까지의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포함된 고문범죄(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다(같은 법 제6조). 그러나, 이는 「국제형사범죄법」 상의 집단살해죄등이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이 있는 행위’나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이지 그러한 행위가 단지 고문범죄라는 이유로 특별히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국제형사범죄법」 상 고문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밖의 모든 유형의 고문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공소시효 적용 또는 배제 여부가 고문의 정당화에 대한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고, 공소시효 배제 여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법의 예외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고문범죄의 구체적인 유형 별로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차등화한 입법 취지, 고문범죄의 법정형이나 유형·죄질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예컨대, 독직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독직폭행

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독직폭행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엔고문 방지위원회의 견해(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제정안(2020년 7월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국가공권력을 이용한 폭행,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제2조



질의 4.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1~12번 문단)와 관련하여 청소년, 영장 없이 진행된 긴급체포 절차에 따라 구속된 자, 피의자, 미결수용자 등 모든 수용자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때부터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 (a) 혐의, 권리의 내용,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당사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구두와 서면으로 안내받을 권리
- (b) 경찰이나 검찰이 내세운 상당한 이유에 근거가 있을 때도 구금 시점부터 소송단계 전반에서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받거나,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격있고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기밀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c) 구금 장소 도착 후 24시간 내 자격 있는 의사에게 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수용자의 요청 시 독립적인 의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기밀 유지를 원칙으로 고문에 의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부상에 관한 진료기록을 의사가 직접 담당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도 명시
- (d) 체포 후 즉시 가족이나 원하는 사람에게 체포 사실을 알릴 권리
- (e) 체포 후 48시간 이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체포 즉시 이송을 포함한 모든 구금이 기록될 권리, 변호인과 가족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f)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 (a) 모든 수용 당사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구두와 서면으로 안내받을 권리

- 5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 보호하는 경우 구두 또는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서식, 7개 국어로 번역하여 사용)으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다는 사실과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해당 외국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별도로 지정한 사람에게 또는 원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보호된 이후에도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인권국)에 인권침해의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보호실 내에 비치하고 있으며, 각국의 대사관 연락처도 각 보호실 내에

- 비치하여 언제든지 자국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7조에 따라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수용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고 있다.
  - 7 또한, 수용자가 「형집행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4조 소정의 교정시설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율위반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보장되는 전반적 절차는 <표-1> 참조.
  - 8 경찰은 외국인 형사상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91조제1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217조 규정에 의해 체포·조사 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는 등 외국인이 언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91조제2항 규정에 의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원과의 접견·교통을 할 수 있고 체포·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양국 간의 영사협약에 따라 피의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체포·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인 외국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비단 체포·조사 시점뿐만 아니라 그 외에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외국인이 자국 언어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 9 또한 경찰은 외국인 피의자 체포 시 일명 ‘폴리폰’(신원 및 수배사실 확인, 차량번호판 조회 등 외근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활용, 살인 등 33개 죄종에 대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6개국 언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체포 직후부터 외국인이 자국 언어로 자신의 혐의 및 권리에 대해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0 또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7조제4항, 제5항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경찰 구금시설인 유치장에 처음으로 입감될 때에는 변호인 및 가족, 친지 등과의 면회 등 유치장 안에서의 각종 권리를 기재한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안내문 및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외국어로 번역·게시하였고, 신체검사실에는 신체검사 방법·절차·사유 등이 기재된 외국어 안내문을 비치 중이며, 유치인보호관들이 유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유치장 생활안내서’(유치장 근무 시 상황별 질문을 영어, 중국어 등 8개 국어로 정리)를 2018년도 제작하여 유치장에 일괄 배부함으로써 외국인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유치장 또는 체포현장 등의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통역서비스(관광안내전화, bbb Korea 등) 또는 휴대폰 통역 App을 적극 활용하도록 경찰관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 **(b) 무료 법률구조 및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11 대한민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의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경찰 검찰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변호인이 위법하게 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된다.
- 12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대검찰청은 2017년 12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대검 지침)을 개정하여 변호인이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9년 5월에는 변호인의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하였다. 나아가 2019년 10월에는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 확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 최소화,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직접적 구두변론 기회 전면 부여,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2019년 11월에는 위 내용을 명문화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대검 예규)을 시행하였다. 2020년 1월에는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 시행하여, 피의자 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증거인멸, 공범 도피, 중요 참고인 위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13 특히 구금된 자에 대하여,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제84조는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변호인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추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보장하고 있다. 수사절차상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14 현행 「형사소송법」 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무료 법률구조)를 인정하고, 피의자의 국선변호(무료 법률구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와 체포·적부심절차(「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무료 법률구조)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신설한 취지에 따라 경찰은 변호인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2018년 3월 7일부터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그 내용은 <표-2>와 같다.

### (c) 구금장소 도착 후 24시간 내 의사에게 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 15 「형집행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3일 이내) 건강진단을 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검진을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교정시설 내 의사(의무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16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47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해 <표-3> 참조.
- 17 「형사소송법」 제34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유치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질병·상해 등을 이유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유치장에 게시 중인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안내문에도 의사에게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치인이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유치인이 의약품 복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약물의 처방전 및 병원·약국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외국인 근로자·난민 등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원 및 수술비,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 및 응급치료가 필요한 유치인이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비, 처치료를 우선 의료기관에서 지불하게 한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나중에 유치인으로부터 상환받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활용하는 등 유치인 건강권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 수용자의 요청 시 독립적인 의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18 수용자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교정시설 내 의사(의무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형집행법」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 고문에 의한 부상에 관한 진료기록을 의사가 직접 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 19 진료기록이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소장의 허가를 거쳐 의사(의무관)가 검사에게 임의제출할 수 있다.

### (d) 체포 즉시 체포 사실을 알릴 권리

- 20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와 같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가족 등이 통지를 받는 권리는 「헌법」 제12조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의6조, 제201의2조제10항, 제209조, 제213의2조, 제87조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와 변호사 등 체포적부심사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2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57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 (e)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재판받을 권리

- 22 대한민국은 체포와 구속이 구분되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는 「헌법」, 「형사소송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한 구속영장제도, 체포적부심 등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2항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도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12조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의해 보장된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 체포 즉시 이송을 포함한 모든 구금이 기록될 권리

- 23 대한민국에서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등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980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 관련 서식에 체포일시 및 장소, 인치·구금할 장소 등 체포된 즉시 이송을 포함한 모든 구금 사실이 기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4 구금되어 교정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사항을 수용기록부 및 교정정보시스템(보라미시스템)에 기록 및 입력하고 있고, 교정시설 간 이송되는 경우 또한 기록 및 입력되고 있다.
- 25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범인 체포서, 긴급체포서 서식에 체포 일시·장소, 인치·구금한 일시·장소, 체포자 관직·성명 등 체포 및 구금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직접 이러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도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자적으로도 기록·관리되고 있다. 이렇듯

- 26 경찰에서는 모든 체포·구속 시 구금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체포 유형의 석방서 서식을 통해 석방에 관한 사항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 경찰 유치장의 경우에도 피의자를 입감(구금)할 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감지휘서 서식에 의해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입감지휘서에 입감(출감도 동일) 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입감 일시 등 구금과 관련된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이것을 유치인보호주무자(주간 수사과장, 일과 후 및 공휴일 경찰서 상황관리관)가 확인 및 점검하도록 하는 등 모든 구금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27 피의자는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송치여부, 검사실 배당, 기소여부 등)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고, 피의자가 시스템에서 대리인(변호인, 가족 등)을 지정할 경우(수사기관, 사건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변호인 등록번호 등 입력) 대리인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회 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공하는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에는 구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구금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위 조회와는 별개로 체포 구속 시 가족 또는 변호인에게 구금사실, 구금장소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있다.

### (f) 변호사 조력으로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 28 피의자가 구금에 대한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체포·구속의 적부심사가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찰관은 피의자와 위 열거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구를 받은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 등을 조사한 후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은 이러한 심문절차에 출석하여 피의자 구금의 적법성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인 조력에 의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의 5.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3~14번 문단)와 당사국이 제공한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CAT/C/KOR/CO/3-5/Add.1)와 관련하여 2016. 9. 25. 경찰이 쏜 고압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두개골이 골절되어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사건에서 2018년 6월 5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과 경관 2인에게 선고된 형,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세 경관에 대한 조치(14(d)번 문단), 위에 언급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과실에 비하여 선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2018년 6월 8일에 검찰이 제기한 항소의 결과, 물대포 조종을 배정받은 시위진압 경찰의 훈련 부족과 안전점검 미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8가지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백남기 씨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사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고 백남기씨 사건 관련자 판결 및 조치 경과

- 29 대한민국 검찰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 농민을 직사 살수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금지)을 위반하고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2017. 10. 17.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前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다. 2심 재판부는 2019. 8. 9.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벌금 700~1,000만 원)를 선고하고, 특히 총괄책임자인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과잉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9. 8. 13.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에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 시위진압 경찰의 훈련 부족 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 30 모든 경찰부대에 대해 상·하반기 각 4~10주간의 ‘집중교육’ 기간을 지정하여 ①인권·안전교육, ②법과 원칙에 따른 현장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통계 <표-4> 참조)

####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8가지 권고 이행상황

- 31 대한민국 경찰은 2017. 8. 25.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2018. 2. 1.부터

2018. 8. 20.까지 6개월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 살수행위와 피해자 부상 당시 상황, 사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18. 8. 20.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일 경찰이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행위와, 상급자가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경찰에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것 등 8개 사항을 권고하여 <표-5> 참조) 그 중 7개 권고를 이행하였다. 다만, 법률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권고사항 중 국가가 제기한 소송의 취하와 관련된 내용은, 당해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소송 종결되었다.

### 백남기씨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사죄에 관한 정보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2018. 1. 2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종결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액 4억 9천만원(약 41만 미국 달러)을 지급하였다.

경찰은 2017. 6. 16.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경찰청장은 “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백남기 농민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였다. 그 후 2017. 9. 25.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를 맞아 재차 사과하였고, 2017. 10. 17. 검찰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 후 다시 사과하였다. 2019. 7. 26.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다.



**질의 6.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3~14번 문단)와 당사국이 제공한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CAT/C/KOR/CO/3-5/Add.1)와 관련하여 다음을 요청한다.**

- (a) 1주기 추모집회 중이었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비롯하여 조사기간 중 물대포 발사와 최루액 분사 등 과잉진압에 대한 진정 및 조사 내역,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 재할 및 보상 등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최신 정보
- (b) 경찰관들이 무력과 화기 사용 및 절대적 고문 금지 원칙에 관한 적절한 훈련을 받는지에 관한 정보
- (c) 물대포 조종에 관한 기동대 훈련을 포함하여, 집회 관리 전술이 재검토된 적 있는지와 백남기 씨 사망 이후 안전점검이 더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



**(a)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과잉진압에 대한 진정 및 조사 내역**

32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2014년 8월 위원장 성명으로 정부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2015년 4월 1주기에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입법 정비를 비롯해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경찰의 과도한 진압을 감시하기 위하여 1주기 추모집회를 비롯한 관련 집회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하였다.

**—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 재할 및 보상 등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최신 정보**

33 2015년 9월~2017년 4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총 299명 중 121명의 유가족들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 배상을 거부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소가 1,078억원)을 제기하였으며, 2018. 7. 19. 1심 국가일부패소(패소액 약 724억원)하였다.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 재할 및 보상 등에 대한 최신 정보는 <표-6> 참조.

**(b) 경찰관들이 절대적 고문 금지 원칙에 관한 적절한 훈련을 받는지**

34 경찰청은 경찰관 인권교육 중기 기본계획(1차 2018~2020)을 수립하고 경찰관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동영상 자료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훈령)을 제정하여 고문금지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4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인권행동강령 해설서 등을 제작, 배포하고

경찰관 대상으로 고문금지 원칙을 교육하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표-7〉 참조) 해설 및 현장 경찰관 대담 형태의 교육 영상을 제작,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장교육 의무화 실시하여 고문금지 원칙 등 인권의식을 제고하였다. 경찰청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 6시간의 의무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인권 보호 활동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의무교육 외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 교육 콘텐츠를 통해 일상생활 속 인권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인권 포켓북을 제작 배포하여 현장 경찰관의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파하여 고문금지 원칙 등의 내용을 숙지토록 하였다.

**(c) 집회 관리 전술이 재검토된 적 있는지,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 안전점검이 더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 35 경찰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소요사태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배치·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거리별 수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020년 1월 개정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업무 경험자 등을 선발하여 ‘집회시위 현장안전진단팀’을 신설하여 (〈표-8〉 참조) 등을 통한 참가자와 일반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집단민원 현장 등에서 당사자 간 충돌이 발생했거나 명백히 예상될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충돌 제지·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질의 7.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5~16번 문단)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들어 사람을 자의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하거나, 자백을 강요해서 는 안 된다는 등으로 협약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조사기간 중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 한다. 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동법 제7조 ‘찬양·고무’의 모호한 정의에 수정이 있었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협약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조사기간 중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했는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동법 제7조 ‘찬양·고무’의 모호한 정의에 수정이 있었는지**

- 36 조사 기간 중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한 바 없다. 「국보법」 제1조제2항은 확대해석 금지 등 엄격한 해석·적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보법」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보법」 제7조의 합헌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국보법」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 37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법률 및 판례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보법」을 적용함으로써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속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실제로 「국보법」 위반(찬양·고무등)죄로 기소된 인원은 2015년 42명, 2016년 16명, 2017년 11명,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6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2020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85.7% 감소하였다. 「국보법」 위반죄로 기소된 인원 관련 통계는 <표-9> 참조.



**질의 8.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9~20번 문단)와 관련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장소에서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을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가 수립되었는지, 해당 제도에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의료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조사기간 중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국방부 인권과에 접수된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 건수와 관련 조사내용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도 요청한다.**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장소에서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을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가 수립되었는지**

- 38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구금된 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거나 직권으로 군 교도소,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구금시설을 방문 조사하고, 진정 조사 시 입회인 없이 수용자를 면담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정부 기관 등에 정책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39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법무부 소속 각종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문 및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 인권국은 법무부 소속 각종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용이하게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업무에 관해 <표-10> 참조.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및 관리자에 대한 수사 또는 징계 의뢰, 개선조치 요구, 국가배상 또는 법률구조 안내, 제도개선 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 해당 제도에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의료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정보

- 40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침해사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이하 '진정인')의 의료증거(진료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는 구금시설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료법」에 따라 진정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금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다.

## 접수된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 건수와 관련 조사내용 및 결과 정보

- 4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형법」 및 「특가법」 상 범죄인 고문 또는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접수되어 수사, 기소된 현황은 <표-11>과 같다.
- 42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표-12>과 같다. 본 현황의 '고문 및 가혹행위'의 경우, 과도한 장구 사용, 위법한 체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위 문단의 '고문 또는 가혹행위'와는 그 범위를 달리함을 밝힌다.
- 4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장 권리구제 중 제101조에 의해 처우에 관하여 소장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제10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그 처우에 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군 인권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334호) 제47조에 따라, 군 교정시설 수용자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정사건은 2018년 1건, 2019년 7건, 2020년 7건이 처리되었고, 이 중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에 관한 건은 0건이며, 위 진정사건은 대부분 처우개선에 관한 건이다.



질의 9. 위원회의 이전 최종건해(43~44번 문단)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깨끗하고 투명하고 참여적인 위원 선정과 임명 과정이 수립되었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었는지, 이를 수행할 충분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지 시찰을 몇 차례 수행했는지 밝히고, 조사기간 중 당국이 어떤 고문방지 관련 권고를 이행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덧붙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놓고 검토한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추가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A/HRC/37/11, paras. 130.12-130.14).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지명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투명한 임명과정

44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였다.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였다. 자격 기준에는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도 포함하여, 인권옹호자 역시 경력을 인정받아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였다.

####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정보

45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리감독에 관해서는 38문단 참조.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은 모두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화·우편·방문·이메일·홈페이지·팩스·방문진정접수·진정함 설치 등 접수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진정 접수를 활성화하였다.

#### 조사기간 중 당국이 어떤 고문방지 관련 권고를 이행했는지 예시 설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과 관련하여 총 46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검찰청 및 경찰청을 대상으로 구제조치 권고·징계권고·수사의뢰·고발하였다. 이 중 구제조치 권고·징계권고 38건 중 일부수용 2건, 불수용 2건을 제외한 34건이 수용되었으며,

고문방지 관련 권고에 대한 이행으로 피진정인 개별조치, 조사·장구 사용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인권교육, 고문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 등이 이루어졌다. (개별 권고 내역은 부록 〈표-13〉 참조)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내용 명시

- 4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고문방지소위원회(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에 부여한 권한은 군사 기밀보호, 각종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등 관련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즉시 비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에 따라 수립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38번 문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규정한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s)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내 구금 시설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의도한 바와 같이 독립적 기구로부터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감시를 받고 있는바,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 47 정부는 2018년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이하 ‘NAP’)을 수립하였다.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2차례의 공청회와 정책과제별로 유관 시민단체 및 정부 부처가 참여한 총 18회의 간담회를 거쳐 수립된 제3차 NAP에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다수 수록되었다. 주요 과제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검토, 집회시위 현장 법 집행의 적법성·책임성 제고 및 집회시위 관련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을 통한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금지 법제 정비 등이 있다. 아울러 제3차 NAP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포함한 국제협약기구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발표한 최종견해들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각 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할 때 이를 널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조



질의 10.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7~18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여전히 탈북자를 탈북 후 최대 6개월간 합법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지,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탈북자를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구금 최대 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및 보고대상기간중 관련 사건의 수
- (b) 심문과 구금 중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 등 탈북자에게 기본적인 법적 보호가 제공되는지, 심문 시간과 방식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c) 탈북자 송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심리 중 결정 중지 효력이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가 존재하는지, 2019년 11월 7일 북한 어부 2인 송환 시 당사국이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사전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 (d) 덧붙여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 대부분을 없애고, 출입국향의 난민신청자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1차 난민인정심사 결정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1차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독립적인 난민심사 이의신청 기구를 설치하고, 이민자 구금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고, 고문 피해 사실 확인 능력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를 수정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500인의 현황에 관한 정보도 요청한다.



(a) 탈북자를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지, 무기한 구금 가능 여부, 구금 최대 시한

- 48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보호·지원여부(정착금, 임대주택 등)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조사일 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도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어 강제성 있는 구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2018년 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 국내 입국 후 180일 이내였던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국내입국 후 9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2019년 6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NGO보고서는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기간 상한이 3개월로 축소되었으나 보호에

관한 결정기간에 제한이 없어 여전히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 및 조사가 끝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보호센터를 퇴소하여 통일부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 입소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의 보호 여부 결정은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 장관의 권한으로, 정착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임시보호 및 조사가 끝나면 보호 결정 전이라도 즉시 통일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생활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임시보호·조사를 종료하였음에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을 무기한 임시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49 또한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정원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임시보호기간 동안 외부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 또는 면회를 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임시보호기간은 국내 입국 후 60일 정도이다.

### —— 보고대상기간 중 관련 사건의 수

- 50 2018년 2월 개정된 위 시행령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 조사·임시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90일이고, 평균적으로는 60일 내외이다. 따라서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이 6개월 동안 조사·임시보호한 북한이탈주민은 없다.

### (b) 심문과 구금 중 탈북자의 기본적인 법적 보호

- 51 국가정보원은 임시보호 및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외부 변호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임시보호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여부 등을 감시하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과 1:1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그간 국가정보원 내부지침으로 정해온 인권보호관의 업무, 자격, 임기, 독립적 지위 등을 2019. 7. 16. 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52 인권보호관 위촉은 위 시행령 제12조의5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인권보호관 자격 기준은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 10년 이상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 종사한 사람 등이다. 또한 위촉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 현재 외부 여성변호사가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되어 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탈북자 심문 시간과 방식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53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보호·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표-14> 참조.

### (c) 탈북자 송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심리 중 결정 중지

**효력이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가 존재하는지, 2019년 11월 7일 북한  
어부 2인 송환 시 당사국이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사전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 54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하고 동해 NLL 남방으로 도주해 온 북한선원 2명을 2019. 11. 7. 북한으로 추방하였다. 동 건은 북한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정부는 흉악범죄자인 북한주민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추방결정 과정에서 상기 「고문방지협약」을 포함하여 「헌법」 및 국내·외 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참고하였다. 금번 추방 조치는 남북관계 특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d) 「난민법 시행령」 제5조를 수정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

- 55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의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호주·독일의 난민법령, EU 난민인정절차지침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해당 사유에 대해서도 법령개정 등 검토를 지속 중이다. 한편, 2015. 6. 18.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호 규정을 삭제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제19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다.

**——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의 수용 여건 개선**

- 56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생활 시설과 편의시설(〈표-15〉 참조)이 구비된 난민신청자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다.

**—— 1차 난민인정심사 결정의 질적 향상**

- 57 더불어 1차 난민인정심사 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무부는 난민심사담당자의 난민인정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난민전담공무원의 관련 교육 이수율 의무화(연간 50시간 이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UNHCR과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대상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16〉 참조) 난민심사 시 통역품질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전문통역사, 지역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통해 난민통역인의 통역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독립적인 난민심사 이의신청 기구 설치**

- 58 2020년 2월, 법무부 내에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실조사 및 제도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난민심의과」)를 1차 난민심사 제도 운영 부서와 분리·신설하여 독립적인 이의신청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4월, 이의신청 심의 기구인 난민위원회(〈표-17〉 참조)의 상정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전원 위촉직(민간) 위원으로 지명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2020년 7월, 난민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이의신청 심의 안건에 대한 외부 자문을 확대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 —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500인의 현황에 관한 정보

59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 현황은 <표-18>과 같다.

## 제10조



질의 11.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45~46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법집행공무원, 특히 긴급체포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 자유가 박탈된 자와 접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절대적 고문 금지 원칙과 고문방지협약 조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및 해당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
- (b)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가 자유가 박탈된 자와 접촉하는 의료진 및 기타 공무원에 대한 필수적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해당 교육에 참여한 의료진 수
- (c)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교육의 효과성과 고문 사건 감소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a) 자유가 박탈된 자와 접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문방지협약 교육 실시 여부 및 해당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

60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담별 전문교육 과정에 내·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주요 법령, 실무 적용례 및 인권침해 감찰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와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본건 수사를 위한 별건 수사의 부당한 이용 금지, 본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수사 장기화 금지 등을 통해 인권을 배려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오보가 ‘실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법원의 재판 전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공개소환이나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하여 망신주기식 수사나 초상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피조사자 체험을 할 수 있는 ‘롤플레이잉 조사실습’을 실시하여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스스로 인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직, 교정직 등 구금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호장비 사용법 및 정신질환 수용자, 성소수자 수용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검찰 공무원

각 직렬 기초 교육과정에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 편성하여 해당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2020년 총 16,66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 (b) 고문방지 지침서가 의료진 및 기타 공무원에 대한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교육 참석 의료진 수

- 61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의료인은 동법 제30조에 따라 각 의료인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신규면허취득자 등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유예·면제 대상자 제외), 보수교육은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약 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문성과 더불어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2018. 1. 1. 시행)을 개정하여 의료윤리와 의료법령 등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문방지 지침서는 필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시 개정된 의료인의 보수교육 취지와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수 교육과정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62 법무부 소속 각 교정기관에서는 의무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문·가혹행위 금지 등을 비롯한 인권의식 함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 의무관(10명 내외) 및 공중보건의(30명 내외)에 대해 젠더 커뮤니케이션, 수용자 의료정책 및 의무관의 역할, 교정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처우 향상 및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 구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c) 공무원에게 제공한 교육의 효과성 및 고문 사건 감소 효과 평가 체계 수립 여부

- 63 법무·검찰 공무원의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과정과 강의에 대한 설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 항목에는 교육의 기간, 내용,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등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강사의 강의력, 담당 직원의 충분한 지원 등 운영적인 항목, 교육 및 편의시설, 급식 등 교육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항목도 편성하여 교육 전반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미비한 부분은 차후 교육과정에서 보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선 기관으로 복귀한 교육 수료생 및 주변 동료, 상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의 현업 적응도 평가를 통해 교육이 실무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11조



질의 12.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21~22번 문단)와 관련하여 보고대상기간 중 인신구속의 대안을 적극 이용하고, 과밀 수용을 줄이고, 재소자에게 할당되는 공간을 확대하고,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교정시설 내 일일 운동, 재활, 재통합 교육을 설계하고, 교도관과 의료 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외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를 늘리고, 보호구와 구속구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보고대상기간 중 인신구속의 대안 적극 이용 조치

- 64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 신청기준 완화, 단기수형자 가석방 심사 도입 등 가석방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 <표-19> 참조) 법무부는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재소자에게 할당되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유희공간 리모델링·수용동 증축 등 수용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 관련해서는 <표-20> 참조.

### 과밀수용을 줄이는 등 교정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

- 65 교정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LED조명 설치, 난방 개선, 화장실 양변기 설치 등 시설·생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18조(개인위생), 제19조(의류 및 침구)와 관련해서도 공동세탁기 설치, 반팔티셔츠 지급, 개인용 식판 보급 등 위생증진 및 인권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후로도 현행 법령, 수용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교정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교정시설 내 일일 운동, 재활, 재통합 교육 설계 등을 위한 조치

수용자는 매일 1시간 이내 정기적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사회견학 및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사회적 처우를 통해 수형생활로 인해 수형자가 느낄 수 있는 사회와의 단절감을 최소화함으로써, 출소 후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처우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교도관과 의료인력을 추가 고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

- 66 교도관은 보고대상 기간 동안 총 575명을 증원하였다. 의료인력은 최신 의료장비 도입 및 의무관의 직급과 보수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의료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교도관 및 의료인력 확보 관련한 통계는 <표-21> 참조.

### 외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를 늘리기 위한 조치

외부병원 이송진료, 초빙진료, 원격 화상진료 등 외부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는 교정 당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원격 화상진료의 경우는 2020년 11월 47개 교정기관 및 31개 협력 병원에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2017년 14,377건에서 2020년 24,088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송진료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진료가 줄어들면서 37,101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7년 37,403건에서 2019년 39,824건으로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 보호구와 구속구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67 보호구와 구속구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형집행법」 제97조에서 제99조까지 사용 요건, 남용 금지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캠코더, 바디캠 등 영상장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는 90일 이상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1일 4회 이상 보호장비 계속 사용 여부를 심사 및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시간 동정을 관찰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질의 13. 위원회의 이전 최종건해(23~24번 문단)와 관련하여 독방 수용 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갇신이나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자격 있는 의료인이 독방에 감금된 수감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매일 검진하는지, 징벌 대상 수감자에 독립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와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 독방 수용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68 독방구금(금치)은 규율위반의 경중에 따라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법무부는 징벌 중 금치 기간의 상한선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 독방 수용 관련 개정된 법률에 관한 정보

2020. 2. 4., 「형집행법」 제112조제4항 및 제5항 개정을 통하여,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 자격있는 의료인이 독방에 감금된 수감자의 상태를 매일 검진하는지

「형집행법」 제1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4항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의무관이 금치 집행 전·후는 물론 집행 중에도 수시로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고 있다.

### 징벌 대상 수감자에게 독립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와 징벌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형집행법」 제111조(징벌위원회) 제6항에 따라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9 징벌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형집행법」에 의거,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도록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벌의결을 요구한 소장 및 조사를 담당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징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외부위원은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업무 관련 금품수수나 비밀누설 등 불법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징벌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고, 서면 또는 말로써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그 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징벌위원회의 위원 선발 규정의 경우 〈표-22〉 참조.

**질의 14.**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25~26번 문단)와 당사국이 제공한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CAT/C/KOR/CO/3-5/Add.1)와 관련하여 ‘대용감방’ 2곳 폐쇄에 차질을 빚게 했던 예산 부족 문제가 보고대상기간 중 해결되었는지 여부 등 남아 있는 ‘대용감방’ 폐지에 관한 최신 정보 및 모든 지역과 관할권에 적절한 물리적 여건을 갖춘 구치소와 교도소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당사국이 1실 당 교도관 수를 증원했는지, 남아 있는 ‘대용감방’ 1곳을 비롯해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이 있는 모든 구금 장소를 여성 교도관이 감독하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 ‘대용감방’ 2곳 폐쇄 관련 예산부족 문제 해결 현황 및 ‘대용감방’ 폐지에 관한 최신 정보

- 70 정부는 그간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하여 왔다. 남아있던 4개 경찰서의 수용자들까지 모두 인수함으로써 2021년 4월 현재 대용감방을 모두 폐지하였다.

#### 모든 지역과 관할권에 적절한 물리적 여건을 갖춘 구치소와 교도소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최신 정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2020년 속초에 강원북부교도소를 개청하였고, 화성, 태백, 경기북부 등 5개 교정시설의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시설의 이전·재건축(8개 기관) 및 증·개축(6개 기관)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 당사국이 1실 당 교도관 수를 증원했는지

교도관 수에 관해서 66문단 답변 참조.

**남아 있는 ‘대용감방’ 1곳을 비롯해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이 있는 모든 구금 장소를 여성 교도관이 감독하는지**

2020년 8월 남아있던 대용감방 4곳의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에서 모두 인수하였고, 형집행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하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상담·교육·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 15.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27~28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미결수용자 수용시설과 교정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시설별 수용자 사망 건수, 사망 원인과 유형, 사망자의 나이와 성별, 사망사건 조사 결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 보고대상기간 중 질병이 있거나 전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 자살을 비롯한 수용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
- (b) 자살, 돌연사, 적절한 치료의 부재로 인한 죽음 등 구속 수사 중인 자 및 복역 중인 자의 사망을 신속하게 조사하는지, 고문 행위,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 또는 고의적 방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기소하는지, 유죄판결이 난 경우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처벌하는지 여부
- (c) 구금 중 사망 사건 전체에 대하여 독립적인 법의학 검사를 하는지, 유족에게 부검보고서가 송부되는지, 유족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인 부검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a) 미결수 수용시설, 교정시설 모두 포함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한 시설별 수용자 사망건수 및 사망원인과 유형 관련 정보**

71 교정시설 사망자 및 사망원인별 현황은 <표-23>과 같다.

**—— 교정시설 사망사건 관련, 사망자의 나이와 성별, 사망사건 조사결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 정보**

72 교정시설 사망자 중 19세 이상 40세 미만 5명, 40세 이상 60세 미만 54명, 60세 이상 39명이며, 그 중 여성이 2명이고 남성이 96명임. 사망 사건에 대하여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결과 보고 및 내사 종결 처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정시설 수용 중 사망에 따른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총 13건이 제기되어 9건이 종료되고 4건이 진행 중이다. 종료된 9건의 국가배상소송 중 2건에 대해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어 배상했다.

—— **질병이 있거나 전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 제공 정보**

- 73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부병원 이송진료, 초빙진료, 원격 화상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격화상진료의 경우 2020년 47개 교정기관(2021년 전 교정기관 확대 실시 예정)에서 원격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원격화상진료 관련 통계는 16문단 답변 참조.

—— **자살을 비롯한 수용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

- 74 교정시설 내 의무관 진료, 외부병원 이송진료, 초빙진료, 원격 화상진료, 모든 수용자 대상 외부기관 정기 건강검진 실시 및 혈액투석실 운영, 원격의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의료처우를 실시하여 자살을 비롯한 수용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대면상담, 생명의 전화, 화상상담을 통해 자살우려 수용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수용자 대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b) 자살, 돌연사, 적절한 치료의 부재로 인한 죽음 등 구속 수사 중인 자 및 복역 중인 자의 사망을 신속하게 조사하는지**

- 75 수용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 부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수용자 사망사고에 교도관의 직무위반이 있는 경우 상급 감독기관인 지방교정청에서 사망경위, 근무자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고문 행위,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 또는 고의적 방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기소하는지**

- 76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한 공무원은 「형법」 제124조, 제125조, 「특가법」 제4조의2(「형법」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의해 처벌된다.

—— **유죄판결이 난 경우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처벌하는지 여부**

- 77 보고대상 기간(2017년 5월~현재) 동안 구속 또는 수감 중인 자의 사망과 관련된 고문행위,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 또는 고의적 방치를 한 것으로 의심되어 기소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나, 대한민국 검찰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c) 구금 중 사망 사건 전체에 대하여 독립적인 법의학 검사를 하는지**

- 78 수용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 부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 98건 중 유족의 부검 동의 여부, 의사의 부검 필요 소견 등을 고려하여 검사 지휘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였다.

### —— 유족에게 부검보고서가 송부되는지

- 79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 사인에 의문이 있는 사체 등에 대해서는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지닌 검사가 사체를 검시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에 근거하여 부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검을 실시하기 전에는 미리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 결과 등을 설명하여 유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서면으로 된 부검보고서를 유족에게 송부하고 있지는 않다.

### —— 유족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인 부검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 80      구금 중 수용자 사망사고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 사인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검사는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사체를 독립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 98명 중 부검 인원은 총 71명이며, 모두 독립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하였다.



질의 16.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29~30번 문단)와 관련하여 사형제를 폐지하고, 유엔 총회의 반복적인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 투표를 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한 내용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A/HRC/37/11, paras. 132.70-132.89). 사형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법정에서 여전히 사형이 선고되는지, 징역형으로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몇 명이나 감형을 받았는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전에 사형수였던 수형자들이 다른 수형자와 동일한 수감 생활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 사형제 폐지 관련 검토 정보

- 81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가 인간의 천부적 존엄 및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취지에 공감하며,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사형수 인원, 사형 선고 현황, 징역형 감형 여부 등

- 82 2021. 4. 28. 현재 미집행 사형수 인원은 55명이고, 2017년 5월 이후 사형 선고 사례 및 징역형으로 감형된 사례는 없다. 그와 별개로, 국군교도소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 인원은 4명이고, 2016년 2월 이후 사형 선고 사례 및 징역형으로 감형된 사례는 없다.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형수였던 수형자들이 다른 수형자와 동일한 수감 생활을 하는지

- 83 사형확정자의 거실지정, 종교활동, 실외운동, 식사, 진료, 편지수수 등 일반적인 처우는 수형자와 동일하며, 1인당 수용관리 예산도 수형자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심층 상담, 외부전문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제12조와 제13조



질의 17.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35~36번 문단)와 당사국이 제공한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CAT/C/KOR/CO/3-5/Add.1)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군대 내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언어폭력 등 학대와 폭력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취한 추가적 조치 및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놓고 검토한 내용 (A/HRC/37/11, paras. 132.66-132.68)
- (b) 2017년 8월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군인권보호관을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했는지 여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3건의 처리 결과, 군인권보호관의 권한과 법적 지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군대 내 학대와 폭력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부여될지 여부
- (c)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가 설치한 국방 ‘헬프콜’ 등 부대 내 폭력을 예방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 군대 내 인권 존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4월에 게시한 연구사업의 결과, 관련 조치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 (a) 군대 내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84 정부는 군대 내에서 폭력·성희롱·성폭력·가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 「군형법」을 개정하여 병영 내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 시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폭행 및 가혹행위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2016. 3. 29.)하여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의 기본권 및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신고의무와 신고자를 보호 조치토록 명시하는 등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 직접 가해자와 1) 지휘 계통에 속한 인물들의 책임을 설정하며, 2) 행위의 엄중함에 맞는 형벌로 책임있는 인물을 기소 및 처벌하고, 3) 해당 수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는지

85 국방부는 군내 폭언과 욕설, 폭력 및 가혹행위에 관하여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표-24〉 참조)에서 사고의 정도에 따라 1차, 2차 및 3차 지휘·감독자와 관련 참모까지의 지휘 책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여, 지휘 계통에 속한 자들을 문책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법원의 재판은 〈표-25〉와 같이 공개를 원칙으로

- 86 하며, 형사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판결문을 통하여 처벌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하여 (2018. 9. 3.) 군내 성인지적 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性)관련 고충상담 및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처리지원을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폭력에 관한 장병들의 인식, 피해실태 등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수요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성폭력 근절 전담인력을 증원하였다.
- 87 나아가 「부대관리훈령」을 개정·시행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시점 명확화 및 2차 피해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각종 지침 마련 및 법령개정을 하였다.

####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검토 내용

- 88 한국군은 장병들의 동성애 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군형법」 제92조의6 의 경우 군 기강을 저해하는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장병들의 동성애 성향에 따른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화하여 유의하고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253조) 다만 추행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와 군은 과잉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 및 기소 시에 추행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추행죄 기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 89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한 폐지 여부는 동 규정의 보호법익, 입법취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차별 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등), 국방부는 추행죄에 대한 단속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며, 군사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로 처벌한 건수는 2018년 5건, 2019년 2건이다.

#### (b) 군인권보호관 신설 여부

- 90 정부는 현재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1년 5월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 1건과 국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 1건이 제21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국방부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

#### ——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3건의 처리 결과

- 91 기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고, 국가인권위에서 정부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 **군인권보호관의 권한과 법적 지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군대 내 학대와 폭력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부여될지 여부**

- 92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로써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내 인권침해 사건 관련 조사 실시 내용은 38 문단 참조.

**(c) 국방 ‘헬프콜’ 등 부대 내 폭력을 예방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

- 93 국방헬프콜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 제173조의2(운영 현황은 <표-26> 참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군내 소통채널이다.

—— **군대 내 인권 존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4월에 개시한 연구사업의 결과**

- 94 장병들의 군 생활 및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장병 복지 및 인권 사항 개선에 관한 국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주관으로 2017. 9. 11.부터 9. 30.까지 간부 1,764명, 병사 3,917명에 대하여 면접원 부대 방문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중 구타 및 가혹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27>과 같다.

—— **관련 조치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 95 2018년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공동 주관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하여, 병사는 2017년 7.5%에서 2018년 6.8%로, 간부는 2017년 4.3%에서 2018년 4.0%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14조



질의 18. 본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47~48번 문단)를 상기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당사국이 2017년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38명이었던 생존자가 현재는 20명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당사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 20명과 유족에게 협약 제14조 이행에 관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3호(2012)에 따라 보상과 명예회복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을 비롯한 적절한 피해구제를 제공하고, 이것이 생존자 및 유족이 요구하는 바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덧붙여 공식적인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고문방지협약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전문 재활 서비스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등의 피해구제에 대한 집행력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사기간 중 재활 프로그램을 수립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국제협약에 따른 보상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등이 이루어졌는지 등

- 96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 당사자,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 3위원회, 안보리 공개토의 등 다양한 계기 발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해왔다.

### 피해구제 제공 등이 생존자 및 유족이 요구하는 바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9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 최초 특별지원금 4,3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병원 치료 및 간병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정서 지원을 위해 정기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생활상태를 점검하고 지원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매년 피해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연구의 총괄·집적, 후속연구의 체계적 진행 및 향후 후세대 교육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설치(2018년 8월~) 운영 중이다.(관련 주요 사업은 <표-28> 참조)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8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내외 전시, 청소년 작품공모전,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연중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공식적인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고문방지협약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피해구제에 대한 집행력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재할 프로그램을 수립했는지**

일제하 「위안부피해자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의무로 <표-29>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하며,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에 따라 <표-30>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사실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에 따라 <표-31>과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제16조



질의 19.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37~38번 문단)와 관련하여 여성 폭행, 가정폭력,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추가적 조치, 배우자 강간이 「형법」상 개별 범죄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A/HRC/37/11, para. 132.92). 가정폭력 피해자가 금지명령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의료서비스, 법률 서비스, 충분한 기금으로 뒷받침되는 쉼터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추가적 조치

- 98 정부는 2018년 11월 정부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2019년 6월 ‘가정폭력 방지대책’ 내용을 조문화하여 2019년 11월 20대 국회 및 2020년 9월 21대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상 현행법 체포 명시 등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등 임시조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발의 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0월 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2021년 1월 시행).

###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추가적 조치

- 99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추행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특수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 100 2020년 5월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13세→16세 미만), 중대 성폭력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소지죄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을 개정, 시행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 기타 여성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01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해 왔으나,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없이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기반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0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20년 2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주요 대책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폭력 통계 구축 등도 새롭게 추진 중이다.

102 경찰 역시 치안수요자인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경찰청은 2019년 5월 여성대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성안전기획관” 조직을 신설하였다. 2018년 상반기에는 전국 시·도청에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및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2018년 상반기에 불법촬영,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對)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을 강력 추진하였다. 하반기에는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오프라인 촬영자 및 사이트·웹하드·헤비업로더에 대한 단속을 통해 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3,847명을 검거하였고, 음란사이트 150개의 DNS 접속을 차단하고 92개를 폐쇄하였다. 2019년에는 ‘웹하드카르텔 근절 집중단속’을 계속하여 웹하드 62개를 단속하고, 운영자 119명 및 헤비업로더 등 947명을 검거하였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야기된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을 설치·운영하여 총 2,807건을 단속, 3,575명을 검거하였으며, 총 51건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전문화·특성화된 보호·지원대책을 수립, 피해자 담당 경찰을 지정하여 신고 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 1,094명 대상으로 피해영상 삭제·전문기관 연계 등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담수사팀 인력을 지속 확대해 집중수사를 전개하고, 수사관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내실화하며, 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

103 정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한다.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말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의하였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검사의 사후승인 청구, 법원의 사후승인 필요),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104 대검찰청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여성·아동 대상범죄에 대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검찰 내부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여성·아동 범죄 전담 검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젠더 폭력 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 및 교육하였다. 또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2020. 4. 9. 시행)함으로써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하고 있다.

### 배우자 강간이 「형법」상 개별 범죄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최신 정보

- 105 현행법상 부부강간 처벌이 가능하고, 대법원 또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의 객체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2012도14788 판결)하는 등으로, 별도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금지 명령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 106 현행법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 가능하며, 정부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2020년 10월 공포, 2021년 1월 시행)을 통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또한, 위 개정을 통해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고 위반 때 형사 처벌하도록 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쉼터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지

- 107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정된 공간에서 보호를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0년말 기준 전국에 65개소의 보호시설(쉼터)을 운영 중이며, 344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질의 20.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39~40번 문단)와 관련하여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에게 성폭력, 부당한 대우, 개인적인 문서 압수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주노동자가 법률 서비스와 통역 서비스를 비롯한 사법 지원, 정부 지원 센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타당한 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학대를 가한 고용주가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로 조사기간 중 기소된 적이 있는지 명시하고, 관련 소송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에게 성폭력, 부당한 대우, 개인적인 문서 압수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08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등을 여성가족부와 합동 점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8년 6월)을 통해 성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예술·흥행 분야 종사자(E-6)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의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으로서, 본래의 체류자격의 기간 만료 등으로 국내에서 체류가 불가능할 경우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109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 부당처우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5조), 2021년 4월부터는 그 사유를 임금체불·성폭력 등 36가지로 확대하였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폭력·부당한 처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4월에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과 인권교육 등을 의무화하였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시 성희롱 예방교육 및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있으며, 16개 송출국 언어로 제작된 리플렛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입국 초기에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시 성폭력·부당한 대우·개인적인 문서 압수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성폭력·부당한 대우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고용허가 취소된 사업주 및 개인적인 문서 압수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허용(긴급사업장변경)하여 가해자와 신속하게 격리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개소)에 전담자를 지정하여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센터(16개국 언어지원)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관련 지원기관(성폭력 피해 외국인노동자의 보호시설, 쉼터 등)과도 원활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가 법률 서비스를 비롯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

- 110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법률상담, 소송대리〈표-32〉 참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피해외국인근로자 39,466명의 소송대리 지원, 선원 231명에 대한 소송대리를 지원하였다. 외국인근로자통역지원센터(노사발전재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통역지원을 받아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가 정부 지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

- 111 외국인력상담센터(1개소)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4개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방·전화·방문상담 중 이주노동자 피해를 확인하는 경우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개소)는 상담 전담자를 지정하여 성폭력, 부당한 대우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담센터와 지원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쉼터 운영기관의 연락처와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쉼터 운영기관은 노동자의 입소 의사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거처가 없는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 등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쉼터 운영기관(전국 17개소〈표-33〉 참조, '21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쉼터는 사업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E-9, H-2)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약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21년 기준)하여 각 쉼터 운영기관에 부식비(매월 30만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

- 11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적용사업장 고용 시 가입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체류자격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당연 가입하도록 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가 타당한 기간 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13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표-34〉 참조. 특히, 2021년 4월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농지법」·「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농한기·금어기 등 사유로 권고되자, 가입의무가 있는 사회보험 미가입을 추가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를 36가지로 확대하였다.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결과, 외국인근로자(E-9)는 매년 5만 건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처리기한 7일 이내)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허가비율은 99.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에게 학대를 가한 고용주가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로 조사기간 중 기소된 적이 있는지 명시하고, 관련 소송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114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조사대상자(신고인, 피신고인,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즉시 인지된 범죄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기한을 부여하였으나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된 건수는 총 19,841건이다.



질의 21.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41~42번 문단)와 관련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 난민지위 불인정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매커니즘 도입,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결정 중지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덧붙여 이민자 구금기간 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미성년자가 여전히 구금 대상인지, 조사기간 중 이민자 구금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난민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 정보 요청

115 55문단 답변을 참조

#### 난민지위 불인정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매커니즘 도입

공항만에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난민지위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결정 중지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송환 절차의 진행은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 이민자 구금기간 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116 「출입국관리법」은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집행 확보를 위한 보호를 구별하고 있다. 전자는 최대 20일까지로 보호기간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강제퇴거를 통해 출국하게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후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은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하여 명시적인 보호기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여 법 집행 여부가 외국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을 무한정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속히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보호명령의 목적·시간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법무부 내부적으로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통제장치들을 통해 강제퇴거의 집행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55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청구 등을 통해 법원에 보호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관련 사법적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 미성년자가 여전히 구금 대상인지

- 117 정부는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는 최대한 자제하고, 형사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보호되더라도 지명하여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장기보호를 방지하며,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특별보호방을 배정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아동)의 보호 금지 원칙을 법률로써 명문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2020년 1월부터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가 도입되어 출국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외국인의 보호를 최소화하며, 또한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아동 또는 부모를 보호일시해제하여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 이민자 구금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 118 이민자 보호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3월 4일 서울남부출입국 사무소 보호시설 신축(수용능력 56명), 2022년 하반기 울산사무소 신청사 완공예정 및 보호시설 증축(수용능력 160명)으로 보호외국인 분산 수용 추진 중이다. 또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화재방지용 샤워기 교체 등 수시로 보호시설 정기 점검하여 물리적 여건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 119 또한 보호외국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보호소 내 담당 의사가 수시로 내부진료를 실시하며,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도 보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에는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3개 보호시설에 배치하여 보호외국인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주 5회 야외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한국어교육, 건강관리, 종교·오락 등을 포함한 「동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위생사 자격을 소지한 위생원이 보호소 내 위생을 담당하도록 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120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접수 및 조사 관련해서는 38 문단 참조. 법무부 인권국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호시설의 실태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은 보호실 안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대사관 연락처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하여 외부와 자유롭게 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질의 22. 당사국에서 인신매매가 형사 범죄인지 명시하고, 인신매매를 퇴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A/HRC/37/11, paras. 130.45–130.47).

### 인신매매가 형사 범죄인지 명시

- 121 대한민국은 2013. 4. 5. 국가형벌권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형법」 제31장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개정·시행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개념을 법제화하였다. 기존에도 다양한 형벌 규정으로 인신매매 범행을 처벌하여 왔으나,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인신매매죄’를 신설(제289조)하였으며, 인신매매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제296조의2)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형법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착취, 장기 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방조 행위도 독자적인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요건을 마련(「형법」 제292조)하였다.
- 122 나아가 정부는 「형법」 상 인신매매의 정의가 협소하고, 피해자보호가 미흡하다는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2020년 여성가족부 주도 아래 관련 부처 T/F를 구성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정의 규정,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외국인 피해자 보호 제도, 인신매매 총괄 조정 기구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뒤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동 법률은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4월 20일 공포되었으며, 2023.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23 이 법률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군을 정의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인신매매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피해자 식별·보호·지원 및 외국인 특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자 식별 보호·지원 종합계획 수립절차에 참여하는 한편, 인신매매 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124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으로써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한민국은 이미 「형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통해 인신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등 일부 범죄는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의 행위가 없어도 인신매매 범죄로 인정되는

피해자 범위를 '아동·장애인'으로 규정하여 팔레르모 의정서상의 규정('아동')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 인신매매 퇴치 조치

- 125 대한민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 취업과정 전반을 공공기관이 수행토록 하여 인신매매, 노동착취 등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향유할 수 있도록 입국 전·후 「노동관계법」 등을 포함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하여,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1,178명(근로감독관 911명, 산업안전감독관 267명)을 증원하였다. 또한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잠재적 노동착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정하여 장시간 근로 및 폭행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근로감독을 통해 22,574개소를 점검하여 총 58,692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였고, 2018년에는 26,082개소를 점검하여 70,009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였다.
- 126 특히 인신매매 발생 소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온 예술·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단속반 등을 통해 외국인 연예인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E-6 비자 이외에도 사증면제협정으로 입국하여 인신매매 피해를 입는 사건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불법 유흥·마사지 업소 및 불법취업알선자 단속기간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외국인여성 고용 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강요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하고 있다.
- 127 2019년 5월에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알선자 집중단속, 2019년 6월 유흥업소·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등 집중단속, 2019년 9월·11월·12월, 2020년 1월·11월 불법유흥 마사지업소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였다. 나아가 2019. 11. 25.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하여 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여러 국가들과 MOU 체결을 통해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정부간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흥행(E-6) 비자 신청 시 영사인터뷰를 통해 비자심사 강화로 연예활동의 진정성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최초 입국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사전실시 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128 나아가, 법무부는 2020년부터 종전에 체류허가 업무 시 공연기획사 등을 통한 대리 허용으로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상황 인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외국인의 체류허가 심사 과정에서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예술흥행 비자 불법체류율이 40% 이상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 사증발급을 제한하며,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해당 외국인이 체류연장 등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자신청,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인권침해 권리구제 방법 및 관련 기관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

- 129 대한민국에서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범행의 피해자는 성매매행위로 처벌되지 않으며, 「형법」 제12조에 따라 강요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 130 또한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및 여성가족부가 후원하여 펴낸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성매매범죄의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엄정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여성·아동 전담 검사를 대상으로 성매매사건의 형사절차 개관, 성폭력 피해자 식별 및 지원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 131 또한 정부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법률지원, 숙식 제공과 조속한 귀국 지원을 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스마일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위치확인장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가 수사단계나 출입국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누리콜센터와 연계하거나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제3자 통역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조사 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다.
- 132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체류자격 없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역시 통보의무 면제 제도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2018년 9월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의 범위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다. 또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이 두려워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안내문(14개 국어) 배부 등 제도의 홍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질의 23.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33~34번 문단)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고아원, 아동복지센터, 탁아시설, 학교,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에서 법률적·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A/HRC/37/11, para. 130.75).



### 법률적으로 고아원,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33 정부는 2011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을 지도할 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시·도교육청에서는 체벌 이외의 훈육방법이 간접체벌이 되지 않도록 학교 여건에 따라 대안적 훈육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직원인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추가 개정하여 유치원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 134 또한,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속해서 지적되어 온바,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 10. 15.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1. 1. 8.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135 아울러, 202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근거를 마련(제22조)하여, 가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피해 아동의 신속한 분리조치 등을 지역에서 책임지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질적으로 고아원,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36 정부는 체벌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과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그로부터 1주일일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아동학대예방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및 홍보영상 상영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근거를 마련하였다.
- 137 정부는 유치원,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을 대체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훈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체벌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질의 24.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매년 군인 50여 명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군대 내 성폭행, 언어폭력, 학대, 추행 등의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추세를 막고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법률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사법권이 없는 장교가 군사재판을 주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명시하고, ‘군 수용소 구금’과 ‘교정 훈련’ 명목으로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 없이 병사를 자의적으로 구속하는 행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 군대 내 폭력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

- 138 국방부는 군대 내 폭행·협박행위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을 201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군사시설 내 폭행·협박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군형법」 제60조의6). 이로써 군대 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군대 내 이러한 추세를 막고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 139 현행 법률은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또한 「군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 등을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그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사람이나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0조). 특히, 국방부 훈령으로 지휘·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성폭력 등 사실을 묵인·방조·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성폭력 행위자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계양정 시 상훈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률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사법권이 없는 장교가 군사재판을 주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명시**

- 140 현행 법률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장교를 예외적인 경우(강간과 추행의 죄를 제외한 군형법에 규정된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로만 공소제기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지휘관이 지정한 사건)에만 재판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심판관 제도가 판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개정 전에는 심판관 제도 폐지 취지에 맞춰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2017. 7. 7.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한 사건이 한 건도 없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평시 심판관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군 수용소 구금’과 ‘교정 훈련’ 명목으로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 없이 병사를 자의적으로 구속하는 행태에 관한 최신 정보**

- 141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였던 영창제도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의 소지가 있어 구금을 동반하지 않는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률을 2020. 2. 4. 개정 완료하였다. 본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표-35〉 참조.



**질의 25.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31~32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강제입원 요건이 분명하지 않으며 오용되기 쉬워서 환자의 사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2016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법」 특히 제24조제1항과 제2항이 「헌법」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개정한 사항
- (b) 지적장애와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기는 하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강제입원자의 수를 줄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거 강제입원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사기간 중 취한 조치
- (c) 환자가 입원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정신과 의사에게 법원이 항상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의료당국과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여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을 추적 관찰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d) 입원 명령을 내리는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권리와 효과적인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 등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당한 사람이 사실상의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
- (e)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당한 사람과 관련하여 고문방지협약 위반 사건에 대한 모든 진정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진정 처리 및 상담 제도가 조사기간 중 수립되었는지 여부



**(a)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제1항과 제2항 개정 사항**

- 142 2016년 9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여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① 입원병원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에게 추가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하고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표-36> 참조.

**(b) 강제입원수를 줄이고, 비례의 원칙에 의거해 강제입원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43 정부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절차를 개선하였다. 우선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치료입원 전 2주간의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진단입원 기간 동안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①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②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일치된 소견을 제시한 경우에만 계속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조인, 정신과 전문의, 정신질환자 가족, 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비자의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 결정 후 3일 이내에 입원 사실을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비자의입원의 경우 최초 3개월까지만 입원이 가능하며, 입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비자의입원 당시 권리고지를 통해 '입원적합성 조사원 대면조사'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경우 대면조사를 전부 실시하고 있으며, '18년~'20년 대면조사율은 24.7%(실건수: 21,095건)이다. 또한 국·공립병원 전문의 확충을 위해 의무직공무원 확충방안, 보수 등 인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c) 환자가 입원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정신과 의사에게 법원이 자문을 구하고, 의료당국이 아닌 정신의료기관이 강제입원을 관찰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 144 비자의입원의 경우 최초입원 시 2주 내에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최초입원 후 3개월 간격으로 2회,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2인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1인은 반드시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사법입원은 현재의 사법체계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는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인권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준사법입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d) 입원명령을 내리는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입원당한 사람이 사실상의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

- 145 개정 법률은 당사자의 의사가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입원적합성심사 시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대면조사 절차도 도입하였다. 한 각 지자체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신보호법」 상 언제든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인권보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제68조에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에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를 제75조에 격리 등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8년 5월~'20년 12월 기간에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입원적합성 심사결과, 1,051건에 대하여 퇴원결정이 이루어졌다.

**(e)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당한 사람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 위반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정 처리 및 상담제도가 수립되었는지**

- 146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제2조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수용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가 되면 조사, 관행개선 권고, 정책권고 등 다양한 권고사항이 보건복지부에 내려지며 정신건강정책과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며 이행하는 형태이다.

## 기타 쟁점



질의 26. 당사국이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해당 조치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인권 보호에 영향을 미쳤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설명을 요청한다. 당사국이 어떻게 해당 조치가 국제법, 특히 고문방지협약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했는지 설명을 요청한다. 테러 위협 대응 부문 법 집행관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테러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법률하에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몇 명인지, 대테러 조치 대상자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책과 보호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대테러 조치 적용 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결과는 어떠했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 당사국이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

- 147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고, 국가 대테러활동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법과 절차에 따라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표-37> 예시 참조.

### 해당 조치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인권 보호에 영향을 미쳤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 148 이러한 조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은 「형사소송법」 등 한국의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앞에서 제시한 테러자금 지원혐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 또한 국내 일반 범죄사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실질적으로 인권 보호에 별다른 영향을 준 부분은 없다. 일례로 「테러방지법」에서는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이 없다.

### 해당 조치가 국제법, 특히 고문방지협약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했는지 설명을 요청

- 149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범죄도 국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이 「형사소송법」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피의자 권리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제2편 제1장 등에 체포·구속·구금과 관련된 적법절차 원칙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동법 을 통하여 변호인 조력권, 무죄추정의 원칙,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이 구현되고 있다.

- 150 또한,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 중이며, 정보·수사기관 공무원이 테러단체구성죄 등에 대한 무고·위증·증거날조 등의 행위 시 가중처벌 조항을 두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얻어진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테러 위협 대응 부문 법 집행관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 151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 및 수사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선발된다. 검사와 수사관은 선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 금지, 차별의 금지, 공정한 수사, 원칙적 임의수사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검사는 구속피의자를 면담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테러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하여는, 대테러 매뉴얼을 배포하여 테러관련 범죄의 특징과 대응 절차 및 처리 기준에 대하여 교육하고, 매년 주요 수사사례 및 증거수집 방법,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테러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미국 연방검사 및 FBI수사관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고, 2018년 4월 대테러 전담검사로 구성된 출장단이 미국 법무부 국가안전국 등 대테러 기관 여러 곳을 방문하는 등 선진적인 테러 대응·수사 및 예방체계는 물론 그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또는 감독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대테러 조치 대상자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책과 보호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 152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법」 제7조에 따라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인권교육 등 인권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민원처리와 관련, 민원인은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작성한 진술서를 접수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그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안내받게 된다. 이후 민원인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안내·고발이나 수사의뢰·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대테러 조치 적용 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결과는 어떠했는지 명시할 것**

질의와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사례가 없다.



질의 27. 비상사태나 기타 예외적 상황과 관련된 대책의 틀에서도 고문 금지는 절대적이고 훼손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당사국이 고문방지협약의 의무를 준수하여 정책과 행동을 집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또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노인요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갇힌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153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당사국이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갇힌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표-38> 참조.

## 【 부 록 】

표 - 1

### 「형집행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4조 소정의 교정시설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율위반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보장되는 전반적 절차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9조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조사대상 수용자에게 조사 이유를 설명한 후 충분한 진술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혐의자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한 후, 진술 여부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고 그에 대한 수용자의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통지하고 위 정보를 이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종료 후, 조사관으로부터 진술의 강요·폭행·협박 등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받았는지,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거나 유리한 증거 또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자필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4. 진술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오기나 증감·변경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조서에 간인하게 하고 자필로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다.
5. 나아가, 조사 이후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도 구두 및 서면으로 징벌의결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형집행법 제116조에 따른 소장 면담, 같은 법 제117조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6. 아울러, 징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불복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는 등 수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7. 한편, 외국인 수용자가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해당 언어에 능통한 교도관을 전담 요원으로 지정하여 통역 및 번역하게 하거나 같은 국적의 동료 수용자를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적절한 조력과 심신의 안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외국인 수용자에게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상담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만, 변호인의 조언·상담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재 결정(헌법재판소 2004.9.23. 2000헌마138결정)을 참고하여 변호사의 참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장시간 신문을 하는 경우 피의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3.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 옆에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피의자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하기 전에 변호인과 신문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여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도록 하였으며, 협의 시에는 해당 사건의 죄명, 혐의사실의 요지를 변호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의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등에는 선임된 변호인과 신문 일시·장소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였고, 긴급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였고, 기억 환기 차원의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 내용을 경찰관이 확인하는 행위는 금지하였다.
6.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근거하여 신문 중 변호인이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승인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은 수사권개혁으로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반영되었다.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은 피의자의 구금 여부를 떠나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적용될 뿐 아니라,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14조에 사건관계인(피해자·참고인 등)의 조사·면담 시에도 변호인 참여가 준용된다는 규정을 두어 경찰 조사 시에는 신분상 차별을 두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표 - 3

수용자 대상 건강검진

년도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항목
2005년부터	22
2019	31
2020	32

\* 연간 건강검진 실시 인원은 2005년 20,643명에서 2020년 40,242명으로 증가

표 - 4

경찰 교육관련 통계

		대상	교육기간	총 시간	비고
2019	상반기	전국 경찰부대	3. 4. ~ 3.29.	40시간	코로나19 감안 교육시간 조정
	하반기	전국 경찰부대	9.16. ~ 10.11.	40시간	
2020	상반기	전국 경찰부대	5.18. ~ 7.24.	22시간	
	하반기	전국 경찰부대	10.26. ~ 12.11.	25시간	

\* 인권·안전교육 시에는 외부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을 강사로 초청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훈련 시에는 모의 상황을 가정하여 부대원 스스로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한계 등을 도출하는 토론회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집중교육 외에도 각 부대별로 집회시위 현장의 인권 보호 방안,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적정 물리력 행사 등 인권·안전교육을 수시로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 5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8가지 권고 주요 내용

1. 본 사건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발표 및 피해자 가족과 협의하여 사과할 것
2. 본 사건 관련하여 국가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
3.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지침을 수립
4.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 금지
5. 경비계획 수립 시 긴급구호 이행방안 수립
6. 집회시위 관련,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경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할 것
7. 집회시위 현장 대응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휘 무전내용 등을 일정기간 보관할 것
8.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 집회시위 패러다임의 전환 △ 금지통고의 최소화 등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이행할 것

표-6

###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한 최신 정보

- ① 국가의 항소 포기 후 원고 일부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018년 12월 이후 기일 추정)
- ② 2019년 4월 세월호 희생자 중 시신 미수습자의 유족 20명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소가 19억원)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③ 2018년 11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중 세월호 특별법상 배상금을 수령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다른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과 위 수령한 배상금 간의 차액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소가 약 241억원)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019년 3월 이후 기일 추정)

표-7

###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구성(총 10개 조문)

1. 인권보호 원칙
2. 적법절차 준수
3. 비례의 원칙
4.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5. 부당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6. 차별 금지 및 약자 · 소수자 보호
7.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8. 범죄 피해자 보호
9. 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10. 인권교육

표-8

### 집회시위 현장안전진단팀의 사전 안전진단, 현장 안전활동

- ▶ (사전 안전진단) 집회·행사의 장소·인원·방법(무대·방송차량·시위용품 등) 등에 대한 개괄적 위험요소 분석, 현장 안전진단 범위·방법 등 결정
- ▶ (현장 안전활동) △ 집회·행진 시 주변 지하철 환기구, 맨홀, 건설현장 적치물·낙하물 등 안전위험요소 확인 △ 집회 참가자 차단 시 적정지점, 경력규모·장비 등 현장 안전 확인

표 - 9

최근 6년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기소 등 현황

연도	구분	죄명	기소 인원 (명)	구속 인원 (명)	유죄 확정 인원(명)
201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42	13	8
201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6	10	10
201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1	2	11
20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2	0	4
201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3	0	0
202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6	0	0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외 다른 죄명이 있는 경우 포함

표 - 10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관련

- i) 각 구금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 및 면전진정제도(수용자가 진정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면전진정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인권국 조사관이 각 수용시설과 인권국에 구축된 쌍방향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화상면담을 실시하여 진정내용 파악 및 조사 개시)
- ii) 수신자부담 신고 전화,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 및 무료 봉투, 진정함 등을 마련·구축·배포 및 각종 구금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방문 실태조사, 첩보 수집 등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비롯한 인권침해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권침해사건을 직접 확인 및 처리

표 - 11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인 고문 또는 가혹행위와 관련되어 고소·고발 접수되어 수사·기소된 현황

연도	구분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5	직권남용 체포감금	402	450	0	0	0	443	7
	독직폭행 가혹행위	853	877	0	1	0	798	78
	특가법 (체포·감금)	0	0	0	0	0	0	0
	특가법 (독직폭행, 가혹행위)	123	153	0	0	0	153	0

연도	구분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6	직권남용 체포감금	463	451	0	0	0	442	9
	독직폭행 가혹행위	885	881	0	2	0	811	68
	특가법 (체포·감금)	3	3	0	0	0	3	0
	특가법 (독직폭행, 가혹행위)	165	157	0	2	0	144	11
2017	직권남용 체포감금	564	595	0	0	0	572	23
	독직폭행 가혹행위	1,017	1,043	0	1	0	923	119
	특가법 (체포·감금)	0	0	0	0	0	0	0
	특가법 (독직폭행, 가혹행위)	103	124	0	1	0	112	11
2018	직권남용 체포감금	703	721	0	0	0	650	71
	독직폭행 가혹행위	1,021	1,051	0	2	0	911	138
	특가법 (체포·감금)	5	5	0	0	0	5	0
	특가법 (독직폭행, 가혹행위)	119	122	0	1	0	117	4
2019	직권남용 체포감금	682	676	0	1	0	650	25
	독직폭행 가혹행위	1,116	1,119	0	1	0	1,051	67
	특가법 (체포·감금)	0	0	0	0	0	0	0
	특가법 (독직폭행, 가혹행위)	128	119	0	0	0	101	18

표 - 12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

(기간: 2016~2020)

(단위 :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검찰	11	9	2	3	2	27
경찰	335	275	227	185	228	1,250
합계	346	284	229	188	230	1,277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 처리 현황]

(기간: 2016~2020.10)

(단위 : 건)

종결 년도	구분	합계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권고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전체	1,229	75	28	3	8	36	502	12	622	18
	검찰	26	4	4	-	-	-	11	-	10	1
	경찰	1,203	71	24	3	8	36	491	12	612	17
2016년	소계	362	20	4	-	2	14	156	7	170	9
	검찰	7	-	-	-	-	-	3	-	4	-
	경찰	355	20	4	-	2	14	153	7	166	9
2017년	소계	243	15	4	-	2	9	111	1	111	5
	검찰	7	1	1	-	-	-	4	-	2	-
	경찰	236	14	3	-	2	9	107	1	109	5
2018년	소계	255	14	6	-	2	6	108	4	128	1
	검찰	8	2	2	-	-	-	2	-	3	1
	경찰	247	12	4	-	2	6	106	4	125	-
2019년	소계	204	7	4	-	1	2	72	-	124	1
	검찰	3	1	1	-	-	-	1	-	1	-
	경찰	201	6	3	-	1	2	71	-	123	1
2020년 10월	소계	165	19	10	3	1	5	55	-	89	2
	검찰	1	-	-	-	-	-	1	-	-	-
	경찰	164	19	10	3	1	5	54	-	89	2

##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방지 관련 권고

의결연도	연번	의결결과	권고내용	이행현황
2002	1	수사의뢰	○○경찰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기타
2003	2	구제조치 권고	관행적인 밤샘조사와 폭언 등 가혹행위 금지를 위하여 직원 인권교육 실시 권고	수용
2003	3	수사의뢰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기타
2003	4	수사의뢰	○○ ○○경찰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기타
2003	5	수사의뢰	경찰관 사망사건 조사중 가혹행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기타
2003	6	징계권고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폭행에 대하여 ○○ ○○경찰 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권고	불수용
2004	7	구제조치 권고	조사과정에서 폭언 및 밤샘조사를 행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및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수용
2004	8	구제조치 권고	알몸신체수색을 하면서 욕설 등을 한 행위에 대해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경찰총장에게 알몸신체수색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권고.	일부수용
2005	9	고발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련자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개시 의뢰하고, 단순가담자 및 지휘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 하고, 경찰청장에게 밤샘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자체교육실시를 권고	기타
2005	10	구제조치 권고	강도살인 등 피의사건 수사과정에서 욕설·폭언 및 폭행·협박, 야간조사 등으로 피해자(3명)에게 인격권·휴식권·신체의자유 등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당해사건 수사실무책임자(형사계장) 및 수사담당자 5명에 대한 경고조치 권고	수용
2005	11	구제조치 권고	밤샘조사로 인해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수면권, 휴식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어 피진정인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5	12	구제조치 권고	밤샘조사로 진정인과 ○○○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유사행위 재발방지 권고	불수용
2005	13	징계권고	폭행등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의결연도	연번	의결결과	권고내용	이행현황
2006	14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동의 및 허가절차 없이 밤샘조사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담당직원들의 자체교육할 것을 권고	수용
2006	15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 등이 긴급체포 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욕설을 하자 경찰관들이 구타한 내용으로, 진정인을 구타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고, 또한, 피진정인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 진정의 적대관계자를 압수현장에 참여토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06	16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탈의실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며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압수한 드라이버로 진정인의 목을 찔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6	17	구제조치 권고	심야조사시 진정인의 동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고, 기타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권고	수용
2006	18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후 새벽까지 대기하게 한 후 심야조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7시간 동안 형사과 대기실에 진정인을 대기하게 한 후 동의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진정인을 심야조사한 바,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6	19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의 동의없이 진정인을 심야조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해당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담당직원들을 자체교육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0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밤샘조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1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새벽까지 심야조사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2	구제조치 권고	진정인이 ○○경찰서 유치장 수감시 수갑과 포승을 차고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의결연도	연번	의결결과	권고내용	이행현황
2007	23	구제조치 권고	피진정인이 피의자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고,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을 심야조사하고,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울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로 피의자신문절차를 진행한 점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4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의 동의없이 심야 조사를 하고,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여 타액을 채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5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새벽3시까지 진정인을 심야조사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 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6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14시간 동안 밤샘 조사하고, 경사 김0은 진정인이 피의자인 형사사건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진정인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에도 조사참여관으로 참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인정되어 피진정인 경사 00을 주의조치하고, 경장 000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7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2시간여 동안 조사를 강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	수용
2008	28	구제조치 권고	간통혐의로 고소된 피해자가 임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한 후, 조사 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및 수사·유치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수용
2008	29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승용차에 태워 ○○경찰서로 가는 중 진정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인권위 주관의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수용
2008	30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에 대해 경찰장구를 과잉사용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교육할 것을 권고	수용
2008	31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도중 주먹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	수용

의결연도	연번	의결결과	권고내용	이행현황
2009	32	구제조치 권고	2일 간 심야에 감찰조사를 하고, 휴가 중 어린 자녀(만 1, 3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감찰조사에 응하도록 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임. 경찰청장에게 원칙적으로 심야 감찰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지방경찰청장에게 진정 내용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수용
2009	33	구제조치 권고	소년 피의자 연행시 폭행, 보호자 통보없는 심야 조사, 조사시 위협행위에 대해서, 피진정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 경고 및 주의 조치 권고	일부수용
2010	34	고발	○○경찰서 고문 가해자들에 대하여 「형법」 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로 인권위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형법」 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혐의개연성이 농후한 고문가해자들에 대해 인권위법 제34조에 의거 검찰총장에게 수사요청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권고	기타
2010	35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장에게 밤샘조사이시 사전동의서를 받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 민간인에게 입건대상자명단을 건네준 행위에 대해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3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10	36	구제조치 권고	1) 피해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하고 피해자 스스로 피의자임을 주장하여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를 수배자로 의심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향후 인신구속 등 수사 상 지문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채취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72일간 구치소에서 구금되는 사건의 발단을 야기하여 그 책임이 중하다 할 것임으로 '징계'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자 하였으나, 2009. 11. 12. 진정사실과 동일한 사유로 각각 피진정인 1)은 '견책', 피진정인2)는 '기각' 처분 받은 사실이 있어 불문하고 2) 피진정인3,4)의 경우 검찰청으로 인치된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확실히 하지 않고 간과하여 피해자를 노역장 유치토록 집행지휘함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토록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속기관의 장인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3,4)에 대한 '주의'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	수용
2010	37	구제조치 권고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걷어차 찰과상을 입힌 것은 인격권의 침해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에 대해 '계고' 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의결연도	연번	의결결과	권고내용	이행현황
2010	38	구제조치 권고	진정인에게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범행현장을 검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인 형사와 강력 3팀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향후 이와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수사 업무담당직원들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0	39	수사의뢰	1. 진정인에 대한 조사 신문 중 가혹행위 및 방조행위를 한 피진정인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 2. 경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및 부당한 심야조사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피의자 신체확인 및 CC-TV 등 관련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	기타
2011	40	구제조치 권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사를 하면서 총 3시간 20분 동안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지구대 및 수사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 시 수갑사용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1	41	수사의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	기타
2012	42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수사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심야조사 시 유의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2	43	구제조치 권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3	44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호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3	45	구제조치 권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수갑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3	46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

표 - 1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행정조사 관련 주요 내용

- △ 출생지·직업·가족관계 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북한이탈동기·범죄경력 등 비보호결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및 질병치료·사회정착 교육 등 임시보호조치 기간은 법령상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표 - 15

### 난민신청자 대기실 생활 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

생활 시설	남·녀 생활실(각 1) 및 침실(6개), 가족실(1개), 화장실(3개)
편의 시설	소파, TV(2대), 음료대(2), 잡지 가판대, 개인사물함(6개)

표 - 16

### 연도별 법무부-UNHCR 공동교육 실시 현황

연도	2018	2019	2020. 10.
횟수(참여인원, 명)	6(311)	9(256)	4(97)

표 - 17

### 난민위원회의 구성

난민위원회는 「난민법」 제26조에 따라 임명(위촉)된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6명과 난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판사, 변호사, 교수, 인권단체 관계자 등)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표 - 18

###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 현황

(2020. 10. 31., 단위: 명)

총계	심사완료				심사 중			직권종료**
	소계	인정	인도적	불인정	소계	1차	이의신청	
550*	521	4	501	16	3	0	3	26

\* 국내출생자 1명 포함

\*\* 완전출국 등

표 - 19

## 가석방 관련 통계 ('17~'20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1월
총 출소인원 (형기종료+가석방)	31,596	30,452	29,187	25,443
가석방 인원	8,275	8,693	8,174	7,294
가석방 출소율(%)	26.2%	28.5%	28.0%	28.7%

표 - 20

##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 (2017.5~2021.4)

연도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
2017년 5월	122.1
2018	113.3
2019	112.7
2020	111.0
2021	105.7

\* 강원북부(교) 신설, 광주·청주·군산·경북3(교) 등 수용동 증축 사업, 서울·인천(구) 등 수용동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수용공간을 확보

\*\* 2021년 4월 현재 수용자 1인당 거실 면적은 3.34㎡이다. 앞으로 2022년 거창구치소가 완공될 예정이며, 경기북부(구), 화성여자(교) 신축 및 전주·원주·창원(교) 이전신축 사업, 청주·천안·목포·강릉(교) 등 수용동 증축·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수용공간을 확보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할 계획

표 - 21

## 교도관, 의료인력, 공중보건 의사 증원 인원 관련 통계

	교도관	의료인력*	공중보건 의사
2017	25	5	1
2018	108	13	4
2019	97	4	16
2020**	345	6	20
합계	575	28	41

\* 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포함

\*\* 2020년 교도관 및 의료인력 1인당 수용자 수는 각각 3.3명과 157.1명이다.

표 - 22

### 징벌위원회의 위원 선발 규정

- ① 「형집행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3조에 따라 징벌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을 가진 자, 교정위원들로 구성된 교정협의회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 ②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정 종교나 사상에 편향되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지닌 위원들로 징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표 - 23

### 교정시설 사망자 및 사망원인별 현황 ('17~'19년)

연도	구분 합계	사망 원인							
		질병							자살
		소계	심혈관계	소화기	호흡기	간질환	암	기타	
2017	22	20	14		1	2	2	1	2
2018	40	33	22	1	2	1	1	6	7
2019	36	28	11		4	2	4	7	8

표 - 24

###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4편 사고예방, 제8장 사고보고 및 처리 중 제3절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4편 사고예방, 제8장 사고보고 및 처리 중 제3절 사고처리 신상필벌 기준

제268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자”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동기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2. “사고 관련자”란 사고자에 대한 책임선상의 지휘·감독자와 사고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요원을 말한다.
3. “1차 지휘·감독자”란 사고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평정계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2차·3차 지휘·감독자”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2차는 1차 지휘·감독자를, 3차는 2차 지휘·감독자를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70조(문책대상 범위 및 기준)

- ① 지휘보고 사고 등 중요사고의 문책대상 및 범위 기준에 관하여는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한다.
- ②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유형별 사고결과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1, 2, 3차 지휘·감독자 및 관련 참모의 문책 대상을 심의한다.

표 - 25

## 군사법원의 재판 공개 관련 원칙

「군사법원법」 제67조 (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 26

## 국방헬프콜 운영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1.30. 현재
신고/상담 접수건수	5,039	17,258	40,482	57,990	64,149	61,455	48,932	53,235

\* 출처 : '20년 NDSTAT(국방부, 국방헬프콜 운영 현황)

\*\* 자살관련 상담, 병영생활 고충, 군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고/상담을 접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기관이다. 국방헬프콜은 2008년 3월 군장병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의 '생명의 전화'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한 '육군생명의 전화'를 모체로 하고 있으며, 2011년 국정감사 시 전 군 확대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월 육군생명의 전화로 확대 운영하였고, 2013년 8월부터 각 군 군사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신고 전화를 통합하고, 국가특수번호인 '1303'을 획득하여 국방헬프콜을 운영하였다. 국방헬프콜은 1년 365일 24시간 전화 및 사이버(인터넷, 인트라넷)을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방헬프콜로 장병의 고충 및 범죄피해 등이 접수되면 사안을 판단하여, 지휘관에게 지휘조치토록 통보하거나, 수사(군사경찰) 및 조사(감찰)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조치를 취하는 등 부대 내 폭력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 27

##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관한 조사결과('17. 9. 11.~ 9. 30.)

	구타		가혹행위	
	경험	목적	경험	목적
간 부	0.2%	1.8%	0.6%	2.5%
병 사	1.0%	1.5%	1.6%	2.7%

표 - 28

##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주요사업

- (조사·연구·자료서비스) 국내외 자료 수집, 번역서 출간,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등
- (교육·홍보) 웹진 운영, 학술 콜로키움 개최 등
- (대외협력) 영문콘텐츠제작,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표 - 29

「위안부피해자법」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 관련 규정

제2조의2(국가의 의무)

-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표 - 30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상 지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간병인 지원
6. 장제비 지원

표 - 31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

- ① 일본군‘위안부’ 연구소 운영
- ② 전시사업
- ③ UNESCO 등재 지원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8월 14일을 기림의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모 행사를 진행



표 - 32

## 이주노동자 대상 법률구조서비스 관련

구분	대상	유·무료
법률상담	제한 없음	무료
소송대리	체불피해자, 선원, 국내거주외국인 등 공단이 정한 무료대상자의 경우	무료
	무료대상자 이외의 경우	유료

표 - 33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쉼터 운영기관(전국 17개소) 현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쉼터 운영기관	개소
경기	6
충북	1
경북	2
경남	1
울산	1
광주	1
전남	3
강원	1
제주	1
합계	17

표 - 34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②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③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표 - 35

### ‘군기교육제도’ 관련 법률 개정

- ① 이번 법률 개정으로 2020. 8. 5.부터는 영장 없이 구금하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교정·교화를 위한 공동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2일의 기본교육과 인성함양, 체력단련 등을 각 군별 특성에 맞도록 구성한 최대 13일의 보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군기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기교육제도 운영으로 군기강 유지와 인권보장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여 군의 전투력 향상과 함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리라 기대한다.
- ② 영창제도를 대체한 군기교육제도는 지정된 교육장소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이다. 교육기간은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1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1일 교육시간은 상담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으로, 일반 병의 근무시간과 동일하다. 그 외의 시간은 생활관에서 자유시간을 가지나, 복지시설의 이용 및 휴대전화의 사용은 제한된다.
- ③ 교육프로그램은 2일간의 기본교육과 나머지 교육기간 동안의 보충교육으로 구성된다.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군법교육,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보안교육 및 전문상담관에 의한 감정조절교육과 상담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에는 인성교육 영상 시청, 봉사활동, 환경정화, 소감문 또는 감사편지 작성, 체력단련 등 교육기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 36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관련

본 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보장 및 최소한의 침해를 위해 보호입원 대상과 입원요건 등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 ① 보호입원 대상과 관련하여 ‘입원 치료 필요성 또는 자·타해 위험성’에서 ‘입원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으로 개정하였고,
- ② 입원요건과 관련하여 입원 필요성 여부 판단에 대한 남용가능성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에 의한 진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③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비자의입원 신고 의무화 및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조사원 대면조사를 도입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동의입원을 신설하고, 자의입원 퇴원의사 확인 주기를 단축하였다.

표 - 37

### 국가테러방지 활동 예시

우리 정부는 상기 「테러방지법」에 의거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대테러 조사·추적 업무를 수행하던 가운데 시리아내 알카에다 계열 테러단체에 각각 \$960과 \$2,000을 송금한 중앙아시아인 2명을 적발하였고,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0년 5월 징역 18개월, 2020년 9월 징역 12개월을 최종 선고하는 등 테러자금 지원혐의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료하였다.

# 코로나 확산 사태에서 당사국이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갇힌 사람들에게 대하여 취한 조치

교정본부	<p>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모든 수용자와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수시 실시하고, 모든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며, 가석방 확대 및 조질 이송 등 수용밀도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② 신입수용자 입소 시 신속항원검사 등 선제적 검사 실시 후 3주 간 격리 조치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거쳐 음성인 자에 한하여 일반 거실에 수용되되 기저질환 등이 있는 확진자는 외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 치료 및 신속한 형·구속 집행정지를 건의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경증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의료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③ 또한, 교정본부 코로나19 국민소통 게시판 운영 및 서신·전화통화 확대 실시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진자에게는 확진 상황과 향후 치료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후 의무관 진료 및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확진 수용자에게는 감염 차단 방역활동 및 감염병 전문의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영상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④ 더불어, 법무부 내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을 상설 운영하여 확진자 발생기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교정시설별 특성에 따른 개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⑤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수용자에게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p>
외국인 보호시설	<p>보호시설 근무자와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환자 노약자 등 최약한 보호외국인 대상으로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21. 1. 21.부터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출국명령을 할 수 있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호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각국이 항공기 운행을 축소하여 강제퇴거 집행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특히 최초로 송환전용특별기를 편성하는 등 보호외국인을 조기 송환하여 보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했다.</p>
소년 보호시설	<p>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소년보호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면회 및 수사접견 등은 방역을 위하여 폐쇄형 면회실에서 실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서는 일반면회를 중지하고 있으나, 화상면회 등을 적극 실시하여 수용소년의 권리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 의사가 상주하며 환자를 상시 진료하고, 외부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환자가 지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수용소년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선제적 방역 조치로 전 직원 및 신입소년·유증상 소년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지도하는 등 수용소년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현재까지 소년보호시설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p>

국군교도소	국방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1일 1회 수용동 방역, 군수용자 대상 전원 1일 2회 체온측정, 1일 1매 마스크를 지급, 외부인 시설출입을 제한적 승인, 수용동 식당 내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송 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여 잠재적이거나 무증상의 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가족에게만 허용되었던 ‘스마트접견’ 제도를 가족과 지인에게 확대하였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1개소였던 스마트접견실을 2개소로 확대하여 수용자가 고르게 접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소홀해질 수 있는 법률상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선번호인 화상접견 제도를 도입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미결수용자에게 접견환경을 보장하였다. 국군교도소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감염예방과 수용자의 기본권과 처우가 보장된 가운데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입·퇴소는 입소자 본인 의사 원칙으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코로나19 감염 발생(‘20. 1. 20.)에 따라 시설 내 입소자 및 종사자를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20년 1월~11월, 1~7판). 또한, 종사자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 시행하고, 유증상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내 방역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한시적 방역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내 요양병원·시설대응반을 설치·운영하여, 집단감염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있다. * 감염 예방 관리, 입소·출입 시 관리, 비접촉 면회 시행,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포함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질환자의 코로나19 연쇄적인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중수본 정신병원·시설대응반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설치·운영 중이며, 정신건강증진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정신질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중증 또는 기저 질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이송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며(10병상→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5m를 늘리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규격 등을 개선하여 ‘21. 3. 5.부터 시행할 예정이다.